

지역 패권 개념을 통한 ‘군국주의’와 ‘보통국가’ 비교: 해군 군축조약 전·후 일본제국과 아베 2기 내각 이후 현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동 은*

- I. 서론: 문제 제기 및 기존연구 검토
- II. 개념적 검토와 분석의 틀
- III. ‘군국주의’ 일본제국: 전간기(戰間期) 해군 군축조약 전후(前後)
- IV.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 아베 2기 내각
- V. 결론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군국주의로의 회귀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의 일본제국과 현대 일본의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의 국제체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두 시기의 국제체제적 특성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두 가지 사례가 보이는 차이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 당시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파리강화회의, 워싱턴 해군조약, 런던 해군조약 등을 거치면서 아시아 유일의 열강이라는 국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아시아 내 식민지를 가진 서구 열강들이 여전히 역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세력팽창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로 인해 서구 열강들은 유럽의 전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패권 공백’이란 국제체제적 특성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지역 패권국이 되었다.

2012년 이후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는 과거 군국주의와는 달리 ‘패권경쟁’적 신냉전의 구도 속에 놓인 동북아시아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주변 국가 대비 양적 군사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구적인 차원에서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주제어: 지역패권, 군국주의, 보통국가, 해군 군축조약, 군비증강

I. 서론: 문제 제기 및 기존연구 검토

1910년 경술국치로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계속된 일제(日帝)에 의한 36년의 국권침탈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각인되어 있다. 해방 70주년을 넘어 8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현재에도 그 상처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다. 특히, 한일관계의 민감한 이슈인 과거사 문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일제의 무단침략 기간 중 과거 일본제국이 우리 선조들에게 저지른 만행(蠻行)에 대한 대다수 한국인의 강한 분개심에 비추어 볼 때 과거사 문제가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2기 내각의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일본의 보통국가화(普通國家化)를 바라보는 한국 내 대다수의 시각 역시 부정적인 기류가 매우 강하다. 그중에 일부는 아베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보통국가화나 우경화 기류가 결국에는 과거 일본제국의 군국주의로 회귀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이 뿌리 깊은 한국인의 반일(反日)감정에서 비롯되며 아베 내각이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무력화함으로써 과거 일본제국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다소 허황된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감정에 기반한 접근방식은 '약(藥)'이 아닌 '독(毒)'으로 돌아와 우리 대한민국의 사활적 국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군국주의의 회귀라고 바라보는 시각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과거 일본제국의 군국주의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戰間期) 중 해군 군축조약 전후의 시기와 현대 일본의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 시기의 국제체제적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여기서 국제체제적 특성은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의 유무와 이에 따른 경쟁의 양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체제적 특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두 가지 사례 간에 확실한 국제체제적 특성의 차이점을 도출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과거 일본제국 군국주의로의 회귀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보통국가 개념과 안보정책, 군사전략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했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인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徳成) 교수는 지난 2016년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해 자위대 조직과 장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저를 작성했다. 미치시타 교수는 일본 자위대가 사용 중인 다소 '비상식'적인 군사 용어와 개념들을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방위 정책적 투명성을 높이고 미일 간의 통합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 손기형은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중점을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으로 보았고, 이를 위한 지역안보협력 프로세스 추진을 강조했다. 2) 한의석은 21세기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비교서평을 통해 그들이 21세기부터 어떠한 국가노선 하에서 국가안보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보통국가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논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과거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의 역사적 사례로 인해서 ‘보수우경화, 군사대국화’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일본은 과거 일본제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21세기 현재 일본 자신의 위신과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군사적 능력의 강화와 국제적 역할 확대라는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대중의 상식적 수준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군국주의로의 회귀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관성과 편견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을 통해 반박하였다.

특히,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박영준은 이와 같은 경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인 왈츠(Kenneth N. Waltz)의 ‘세 가지 이미지’를 이용하여 근대 일본의 전쟁 원인을 지도자의 성향, 국가의 군사교리 및 군비증강, 국제체제의 구도를 기준으로 도출하고, 이를 21세기 일본 안보정책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4) 또한, 그는 최근에 2012년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에서 발간된 공식문서와 각종 개념 및 조약 등을 통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분석했다. 5) 이번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되었던 기존 연구에서 다소 주목하지 않았던 왈츠의 “세 번째 이미지(국제체제)”에 중점을 맞추어 과거 일본제국의 군국주의와 현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비교 분석할 것이며, 2012년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 변화한 동북아시아의 국제체제적 특성을 ‘지역 패권경쟁’이란 개념의 통해서 그 비교분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1) 오동룡, “일본 자위대의 명칭변경 움직임과 시사점: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의 논문, 『자위대 조직·장비 명칭 변경안』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75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pp. 133-166.

2) 손기형,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과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한국의 전략: 지역안보협력과 “국가정체성이슈”의 연계(linkage)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1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pp. 115-141.

3) 한의석, “21세기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국제정치논총』 제57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 pp. 495-520.

4) 박영준, “인간, 국가, 국제체제, 그리고 일본의 전쟁: 근대 일본의 전쟁원인을 통해 본 21세기 일본안보정책 평가,”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pp. 259-281.

5)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 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아세아연구』 제58권 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5, pp. 6-41.

II. 개념적 검토와 분석의 틀

1. 군국주의와 보통국가의 개념

군국주의(軍國主義, militarism)는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중시하여, 전쟁과 그 준비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 생활에서 최상위에 두고 정치·문화·교육 등 모든 생활 영역을 이에 전면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사상과 행동 양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⁶⁾ 군국주의는 “모든 국가정책 추진에 군사적 관점이 최우선 하는” 병영국가(兵營國家, The Garrison State)라는 개념⁷⁾과도 유사한 개념이다. 고대에는 스파르타나 로마가 대표적인 군국주의 국가였으며, 근대에 와서는 19세기 이후 프로이센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이 군국주의를 현실로 만들었던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민군관계를 다룬 『군인과 국가』를 저술한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과거 일본제국의 민군관계 상 특징을 ‘정치적 군국주의의 연속성’이라고 표현했다. 헌팅턴의 저서에 따르면 일본제국의 군국주의는 신도(神道)라는 국가 이데올로기 아래 무사도(武士道)에 기반한 강한 군인정신과 문(文)과 무(武)가 구분된 이중 정부 구조, 그리고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일본제국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조합되어 형성되었다.⁸⁾ 이를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는 국가적 이념(신도)과 군인정신(무사도)이란 관념적 기반 아래, 물리적인 군사력으로 일본제국 정부를 장악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보통국가(普通國家, normal state)란 일본 사회의 국가의식이나 정치, 경제체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사용하는 관용구이다.⁹⁾ 보통국가 개념은 1993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의 저서인 『일본개조계획』에서 처음 등장한다. 오자와는 저서에서 일본은 경제 대국이라는 지위에 상응한 국제적 역할, 특히 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중점적으로 주장했다.¹⁰⁾ 이러한 보통국가 담론은 이후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¹¹⁾

6) 두산백과, “군국주의,” 『두산백과(doopedia)』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7634&cid=40942&categoryId=31645> (검색일: 2020. 3. 8).

7) Harold D. Lasswell, “The Garrison 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6 No. 4 (1941), pp. 455-468.

8) 사무엘 P. 헌팅턴, 허남성·김국현·이춘근 공역, 『군인과 국가: 민군관계의 이론과 정치』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 163-180.

9) 정치학 대사전편찬위원회 편,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서울: 아카데미 리서치, 2002).

10) 오자와가 희망했던 보통국가로서의 일본은 다음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였다. ①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 ②인도주의적 지원과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 최대한으로 협력 및 동참하는 것: 오자와 이치로, 방인철·김인철 역, 『일본개조계획』 (서울: 지식산업사, 1994), pp. 104-105.

11) 기타오카 신이치는 아베 2기 내각에서 최초로 발간된 국가안전보장전략서에 명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

에게 계승되었으며, 기타오카는 오자와가 제안한 '보통국가'의 개념을 일본의 구체적인 미래상으로 그려냈다.¹²⁾ 특히, 기타오카는 대외 및 안보정책 분야 관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으로 '미일동맹'을 꼽고 있다. 또한, 그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일동맹 체제를 더 강력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기타오카는 이러한 맥락에서 미일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일본 안보법제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며, 평화헌법 제9조 2항 '군대의 보유 금지'에 대한 부분 개정과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집단적 자위권(集團的 自衛權) 보유 여부 관련 연구 제안을 주장한다. 하지만 기타오카는 평화헌법 부분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보유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이 궁극적으로 군비증강이나 주변국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연계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는 일본은 '대량살상무기 미보유, 장거리 공격능력 미보유, 유엔 및 동맹국의 요청 없는 독단적 국외 군사활동 금지'라는 평화 애호적 3원칙 아래에서 주변국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불필요하게 주변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위와 같은 보통국가화를 위한 일본의 안보법제 재검토 움직임을 '전쟁 국가의 귀환'이나 '부활'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¹⁵⁾ 기타오카가 설명하는 보통국가화의 궁극적 목적은 미일동맹의 강화에 있으므로 이를 지나치게 비약(飛躍)적으로 해석해 군국주의의 회귀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2. 패권과 지역 패권의 개념

패권(霸權, hegemony)의 정의는 “국제관계에서 통상 한 국가에 집중된 힘의 우위(Preponderance of Power) 현상” 또는 “국제정치에서 어떤 국가가 경제력이나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여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는 권력”이다. 패권은 국력의 일반적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력은 경성권력(hard power)과 연성권력(soft power)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성권력의 종류는 국가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이 있으며 객관적 수치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 연성권력은 가치, 문화적 능력, 국제적 위상

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외교 이념을 제시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아베 2기 내각의 보통국가화 추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었다. 박영준, 『한국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와 과제: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평화』(파주: 한울아카데미, 2017), pp. 254-256.

12) 박영준, 『제3의 일본: 21세기 일본외교·방위정책에 대한 재인식』(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pp. 49-53.

13) 위의 책, pp. 53-54.

14) 위의 책, pp. 56-57.

15) 고모리 요이치 외, 김경원 역, 『전쟁 국가의 부활: 아베 저격수 5인의 기록』(서울: 한술수북, 2016); 한다 시게루, 조홍민 역,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 집단적 자위권과 전쟁 국가의 귀환』(파주: 글항아리, 2015).

등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수치화가 어렵다. 결국, 총체적인 국력은 위의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종합한 것이다.¹⁶⁾ 그러므로 한 국가가 패권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거나 획득하는 것에 대한 것은 경성국력과 연성국력의 총체적 합인 국력의 지표가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우월한가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 패권’이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지역’을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이라고 정의한다. 이번 연구에서 다룬 지역은 국가 내부의 사회가 기준이 아닌 전 지구적 영역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의 지역의 정의는 “전 세계를 물리적 경계와 구분에 따라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이다. 지역 패권은 ‘지역’과 ‘패권’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지역 패권이란 “전 세계를 물리적 경계와 구분에 따라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에서의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경제력이나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여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는 현상 또는 권력”으로서 이번 연구에 활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패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할 것이다. 첫 번째는 ‘안정(stability)’으로 특정 지역 내 독보적인 패권 국가가 존재함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패권이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경쟁(competition)’으로 대등한 규모의 국력을 가진 복수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여 특정 지역의 패권을 두고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백(vacuum)’으로 특정 지역 내 패권국 또는 패권국에 준(准)하는 국력을 지닌 국가가 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영향으로 일정한 기간에 해당 지역 내에 부재하게 되어, 지역 패권의 안정 또는 경쟁이라는 상태가 모두 없어진 경우를 이르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의 일본제국이 처했던 국제체제적 특성과 2012년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 현대 일본이 처한 국제체제적 특성을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특성 중 하나로 특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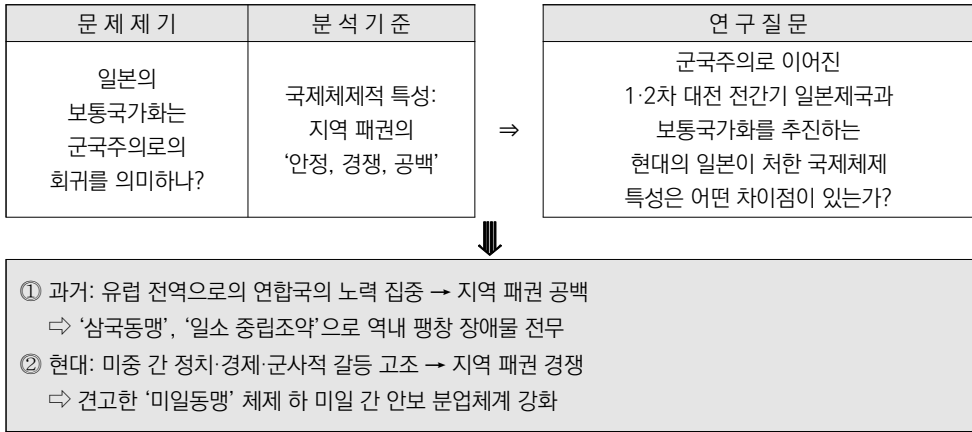
3. 분석의 틀

앞서 살펴본 개념적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표 1>과 같은 분석의 틀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우선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나?”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군국주의와 보통국가라는 개념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과거와 현재의 일본을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역 패권’이라는 개념의 국제체제적 특성을 ‘안정, 경쟁, 공백’이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바라볼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한 연구질문은 “군국주

16) 최석철 외, 『안보관계 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2010), pp. 53-54.

의로 이어진 제1·2차 세계대전 전반기 일본제국과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현대의 일본이 처한 국제체제 특성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이다. 이러한 연구 질문을 통해 얻어낸 잠정 결론은 다음 두 가지와 같다.

〈표 1〉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군국주의와 비교하기 위한 분석의 틀



* 출처 : 저자 작성

과거 일본제국의 경우에는 중일전쟁 발발부터 진주만 기습에 이르는 시기에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내 식민지를 보유한 연합국(영국, 프랑스 등) 모두가 본토의 상황으로 인해 아시아 식민지로 관심을 돌릴 겨를이 없었으며, 미국 역시 진주만 기습 전후(前後) 한동안은 일본의 역내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또한, 일본은 1939년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부터 1940년 9월에 독일·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맺었고, 1941년 4월에 소련과 중립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으로 모든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역 내 타 강대국들과의 마찰을 줄여 양호한 지전략적(geostrategic)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이후까지 계속되었으며, 1942년 6월 미드웨이에서의 패전을 경험하기 이전의 일본은 아시아지역의 패권 공백(hegemony vacuum)을 이용해 역내 패권국의 지위에 올랐었다.

하지만 현대 일본이 직면한 상황은 이와 상이하다. 현대 일본 역시 세계적인 경제 대국 중 하나이지만 현재 아시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경제·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 간 지역 패권경쟁(hegemony competition)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현대 일본의 군사력은 주변국과 비교할 때 해군력을 제외하고 육·공군력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군사력 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¹⁷⁾ 이 때문에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적 일본제국과 같이 독단적인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지 않고, 미일

동맹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미일 양국 간 안보 분업(分業)체제를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군국주의’ 일본제국: 전간기(戰間期) 해군 군축조약 전후(前後)

1. 일본제국 내 군국주의 세력의 성장: 제1차 세계대전 ~ 런던 해군조약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동아시아에서는 역내 관할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과 러일전쟁 이후 아시아 유일의 열강으로 급부상한 일본 간에 비교적 안정된 세력 균형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동아시아에 형성되어 있던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은 무너지고 말았다. 서구 열강들이 유럽에서의 전쟁에 관심을 쏟느라 동아시아의 식민지 문제를 간과(看過)하고 있는 사이에 절호의 기회를 잡은 일본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영일동맹의 일원으로서의 동맹국인 영국의 적국인 독일의 아시아 식민지인 남태평양의 캐롤라인, 마리아나, 마셜, 팔라우, 얍 제도¹⁸⁾와 중국 내 독일의 조차지(租借地)¹⁸⁾인 산둥반도를 점령하였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12년 신해혁명을 통해 중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 정부를 수립한 중화민국(中華民國, 현재의 대만) 정부에 대해 1915년 1월 21개 조항의 요구서를 제출한다. 일본은 이 요구서를 통해 산둥반도 내 독일 조차지의 일본 양도, 만주에서의 권리와 소유권 확대, 중국 해안 지역의 서구열강에 대한 할양(割讓) 제한, 중화민국 정부 내 정치·재정·군사 부문의 일본인 고문관 채용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는 중국대륙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¹⁹⁾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영역팽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戰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에서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한다. 일본이 비판을 받은 이유는 특히 독일의 조차지였던 산둥반도 문제 때문이었다. 일본은 1914년 8월에 독일의 조차지인 산둥반도를 탈환하여 다시 중국에 반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14년 11월에 산둥반도를 탈환한 이후 즉시 반

17)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9 DEFENSE OF JAPAN* (Tokyo: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9), p. 46.

18) 국가가 외국영토의 일부를 그 영토가 속하는 국가와의 조약에 기초하여 차용하는 것을 조차라고 하고, 차용한 지역을 조차지라고 한다. (출처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서울 : 아카데미아 리서치, 2002))

19) 케네스 B. 파일, 이종삼 역, 『강대국 일본의 부활』 (파주: 한울, 2008), pp. 248-250.

환하지 않고 유럽국가들이 산둥반도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위에서 언급한 '21개조 요구'를 중국 정부의 지도자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강요하였고, 결국 1915년 5월에 그 요구를 관철(貫徹)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 파리강화회의에 전승국 자격으로 참가한 중국 대표 구웨이진(顧維鈞)과 함께 미국의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은 일본의 21개조 요구가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므로 국제법상 인정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산둥반도의 중국 반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지만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여 베르사유 강화조약에는 "산둥반도의 권익은 일본의 것"이라는 조항이 삽입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은 파리강화회의를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미국에 대해 큰 반감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에 대한 반감은 1920년대 런던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해군력 군축조약을 거치면서 더 증폭되었다.²⁰⁾

〈표 2〉 워싱턴 해군조약에서 결정된 전함과 항공모함의 보유량

구분	전함 (총 배수량 / 함정 척수)	항공모함 (총 배수량 / 함정 척수)
미국	525,000톤 / 20척	135,000톤 / 약 5척
영국	525,000톤 / 18척	135,000톤 / 약 5척
일본	315,000톤 / 10척	81,000톤 / 약 3척
프랑스	175,000톤 / 5척	60,000톤 / 약 2~3척
이탈리아	175,000톤 / 5척	60,000톤 / 약 2~3척

* 출처: 海軍省大臣官房編, 『海軍制度沿革』第17卷の2(東京: 原書房, 1972);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06-1921* (London: Conway Maritime Press, 1985); 야마다 (2019), p. 106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음.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은 무리한 건함 경쟁(建艦競争)을 지속하고 있었다. 당시의 치열한 건함경쟁은 마치 상대가 만드니까 우리도 만든다는 식으로 '건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딜레마(dilemma)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한 제약(制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먼저 제안되었다. 미국의 하딩(Warren G. Harding) 대통령은 1921년 당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5개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대표가 모여서 해군력 군비 확장제함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 국제회의를 통해 체결된 워싱턴 해군조약(Washington Naval Treaty)의 주요 내용은 ①향후 10년간 주력함(전함, 순양전함)의 건조 중지, ②주력함과 항공모함의 국가별 보유 비율(함정의 배수

20) 가토 요코, 윤현명·이승혁 역,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청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파주, 서해문집, 2018), pp. 240-267.

량 기준)은 ‘미국 5: 영국 5: 일본 3: 프랑스 1.75: 이탈리아 1.75’로 결정²¹⁾, ③건조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력함의 전부, 그리고 노후 주력함 대다수 폐기, ④주력함의 배수량은 1만 톤~3만 5천 톤, 주포는 16인치 이하, 항공모함의 톤수는 2만 7천 톤 이하 탑재 포는 8인치 이하로 제한 등 네 가지였으며, 워싱턴 해군조약에서 결정된 주요 5개국의 주력함(전함)과 항공모함의 보유량은 <표 2>와 같다.²²⁾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며 민감한 조항은 일본의 해군력을 미국이나 영국에 대비하여 60%(6할)로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제국 해군은 가토 도모사부로(加藤友三郎) 해군대신을 중심으로 하는 군정(軍政, 해군성)계통 중심의 ‘6할 수용파’와 가토 히로하루(加藤寛治)를 중심으로 하는 군령(軍令, 군령부) 계통 중심의 ‘평시 7할파’로 분열된다. 1922년 2월 워싱턴 해군조약 체결 당시에는 ‘평시 7할파’가 가토 도모사부로 해군대신의 내부 단속에 굴복하여 일본은 ‘6할 수용’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이로부터 3개월 후인 1922년 5월에 가토 히로하루가 해군 군령부 차장으로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는 이듬해인 1923년 이루어진 『제국국방방침』제2차 개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토 히로하루의 ‘평시 7할파’가 개정을 주도한 이 방침에는 “가까운 미래에 제국의 국방은 우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강대한 국력과 병비(兵備)를 갖춘 미국을 목표로 하여 주로 이에 대비할 것”이라 규정하며 미국을 일본의 최우선적인 잠재적 적국으로 삼았다. 심지어는 “언젠가 충돌하는 건 필연적인 것”이라고 까지 언급하면서 당시 일본제국과 미국 간의 살얼음판과 같던 관계를 더 부각하기도 했다.²³⁾

이러한 외중에 192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서구열강과 일본은 주력함 중심의 군비축소를 상호 약속한 기존의 워싱턴 해군조약을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워싱턴 해군조약에서는 논하지 않은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과 같은 ‘보조함’에 대한 건함경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²⁴⁾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방관한다면 워싱턴 해군조약의 실효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컸으므로, 워싱턴 해군조약의 당사국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는 1927년 6월에 제네바에서 보조함 건조 제한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다. 하지만 제네바에서의 협상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참가하지 않고 나머지 3개국(미국·영국·일본)만이 참가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도 규제

21) 실제 워싱턴회의 개최 직전인 1921년 10월에 드레드노트급 이상의 주력함은 미국 20척(주포 212문, 총 53만 3,410톤), 일본 14척(주포 120문, 총 33만 1,558톤)으로 양국의 비율은 약 5:3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14인치 이상의 주포를 가진 초(超)드레드노트급 주력함의 보유량만 보면 미국 12척(주포 132문, 총 36만 5,000톤), 일본 10척(주포 96문, 총 28만 9,292톤)으로 양국의 비율은 약 5:4에 가까웠다; 야마다 아키라, 윤현명 역, 『일본, 군비확장의 역사: 일본군의 팽창과 붕괴』(서울: 어문학사, 2019), pp. 99-101.

22) 위의 책, pp. 104-106.

23) 위의 책, pp. 110-112.

24) 이정용, “런던군축회의와 일본 해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9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0, p. 142.

방식에 이견을 보였으며, 결국 제네바 협상은 별다른 성과없이 결렬되었다.²⁵⁾

이후 1929년 미국의 후버(Herbert C. Hoover) 행정부와 영국의 맥도날드(James R. Macdonald) 2기 내각이 등장하며 미영(美英) 양국은 규제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이와 더불어 각국 모두가 보조함 건함경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결국 1930년 1월에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 참석한 해군 군축회의가 개최되었다.²⁶⁾

당시 일본의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내각은 일본제국 해군 군령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런던 해군조약(London Naval Treaty)에서의 일본의 협상 원칙을 ①보조함 전체의 대미 보유 비율 70% 확보, ②8인치 주포 탑재 1만 톤급 대형 순양함 대미 보유 비율 70% 확보, ③현 잠수함 보유량 7만 8천 톤 유지 등 세 가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일본 중 미국과 영국은 이미 런던군축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의견조정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군축회의는 일본과 서구열강 연합 간 대립 구도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최종 협상까지 앞서 제시한 3원칙을 고수하지만, 군축회의라는 판 자체를 깨버릴 수 없었던 하마구치 내각은 결국 미국이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하여 1930년 3월 13일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표 3>의 내용대로 4월 22일에 양국 간 최종 조인되었다.²⁷⁾

<표 3> 런던 해군조약에서 결정된 주요 3국의 보조함 보유기준과 보유량의 비교

구분		중순양함	경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미국	기준	180,000톤	143,500톤	150,000톤	52,700톤
	보유	130,000톤(+39%)	70,500톤(+104%)	290,304톤(-48%)	82,582톤(-36%)
영국	기준	146,600톤	192,200톤	150,000톤	52,700톤
	보유	146,600톤(-)	217,111톤(-12%)	184,371톤(-19%)	60,284톤(-13%)
일본	기준	108,400톤	100,450톤	105,500톤	52,700톤
	보유	108,400톤(-)	98,415톤(+2%)	132,495톤(-20%)	77,842톤(-32%)

* 출처: 海軍有終會編, 『近世帝國海軍史要』(東京: 海軍有終會, 1938), pp. 753-757; 海軍省大臣官房編, 『海軍制度沿革』第17卷(東京: 原書房, 1972), p. 773; 야마다 (2019), p. 138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음.

25) 야마다 (2019), p. 135.

26) 이정용 (2010), p. 143.

27) 미국과 일본 간 최종 합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일본의 보조함 전체 비율을 대미 69.75% (36만 7,050톤)로 조정(일본 측 주장 대부분 수용), ②대형 순양함은 대미 60%로 하되 미국이 계획 중인 대형 순양함 3척의 건조를 보류하여 조약 기간(1936년)까지의 비율을 사실상 70%로 조정(미국 측 주장 대부분 수용), ③잠수함은 미국, 영국, 일본 3국이 동등하게 5만 2,700톤을 보유; 야마다 아키라 (2019), pp. 136-137; 이정용 (2010), pp. 145-147.

2. 급격한 군국주의화: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지역 패권 공백’

일본제국 해군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런던 해군조약에서의 타협안을 지지하는 해군성 관료 중심의 ‘조약파(條約派)’와 타협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군령부 관료 중심의 ‘함대파(艦隊派)’로 분열된다. 이러한 와중에 당시 야당인 정우회(政友會)는 런던조약의 조인이 ‘통수권 간범(統帥權 干犯)’이 아니냐며 하마구치 내각을 압박한다. 이는 일왕(日王)의 통수권을 보좌하는 것은 일본제국 해군 군령부장(가토 히로마루)이므로 해군 군령부장이 반대하는 런던 해군조약을 내각이 강행하여 처리한 것은 일왕의 통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문제를 계기로 해군 내에서 런던 해군조약을 반대하는 함대파의 주장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하마구치 내각은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추밀원(樞密院)에서 1930년 10월 2일 조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런던 해군조약 반대파를 자극했으며, 하마구치 총리는 1930년 11월 14일에 도쿄(東京)역에서 조약 반대단체인 애국사(愛國社) 회원 사고야 도메오(佐郷屋留雄)의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다. 이는 이후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군부와 우익단체의 국가개조 운동을 고양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²⁸⁾

앞서 살펴본 하마구치 총리 저격 사건은 1930년대부터 본격화되는 일본 군국주의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序曲)이었다. 일본제국 육군 내 급진 성향 장교들의 모임인 사쿠라카이(櫻會)의 주도로 1931년에는 쿠데타가 2차례(3월, 10월) 시도되었고,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9월에 만주사변을 일으킨다. 이어서 1932년 3월에는 혈맹단 사건, 5월에는 해군 장교와 육사 생도가 주축이 된 5.15사건, 1936년 육군 황도파(皇道派) 위관장교가 주도한 2.26사건 등 일련의 군부 주도 테러, 쿠데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점차 일본제국은 군부 독재체제가 강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1932년 5월 5.15사건에서 당시 총리인 이누가이 쓰요시(犬養毅)가 해군 장교에게 암살됨으로써 일본의 정당정치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후 일본제국의 군국주의화는 건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다.²⁹⁾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을 국제연맹에 제소(提訴)한다. 국제연맹은 이에 1932년 2월에 리튼 조사단(Lytton Commission)을 편성하여 일본과 중국, 만주를 시찰한 후 일본의 만주사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1932년 10월에 리튼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국제연맹에 제출되었고, 이튿날 공표되었다. 이듬해인 1933년 3월 27일에 일본의 조약 위반에 대한 심의에서 만주사변은 일본의 조약 위반이란 결과가 나오자, 일본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시 국제연

28) 야마다 (2019), pp. 138-145; 이정용 (2010), pp. 150-160.

29) 파일 (2008), pp. 301-317; 이정용 (2010), pp. 161-162.

맹에서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通告)했다. 이러한 일본의 강경한 자세는 1934년 런던에서 열린 추가 해군 군축 예비회담으로도 이어졌으며, 일본은 이 회담에서 대미 함정 총배수량 비율을 80%로 주장하는 초강수를 제안한다. 일본은 결국 1934년 12월에 런던 해군조약 폐기를 공표하며 군비 확장정책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³⁰⁾

또한, 일본은 1937년 6월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 등장 이후 더욱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1937년 7월 7일 베이징(北京) 근교 노구교(蘆溝橋)에서의 중일(中日) 양국 간 군대 사이의 우발적 야간 교전을 중일전쟁으로 비화(飛火)하여, 중국 대륙에 대한 일본제국의 세력팽창을 추진했다.³¹⁾ 이와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는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이 올랐다. 1939년 8월 독소(獨蘇)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폴란드와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를 차례로 침공한 독일은 1936년 10월 독일과 일본 간 체결된 방공협정(반코민테른협정, 防共協定), 1939년 5월 독일과 이탈리아 간 체결된 강철조약(鋼鐵條約)을 더 강화하기 위해 독일·일본·이탈리아 간 삼국동맹을 추진했다. 결국, 1940년 9월 27일에 독일·일본·이탈리아는 삼국동맹 조약을 체결했다.³²⁾ 일본은 삼국동맹 체결 직후, 중국 남부지역과 하이난섬(海南島)에 주둔 중인 군대를 독일의 침공으로 혼란에 빠진 프랑스의 식민지 베트남으로 진격시켜 무혈입성(無血入城) 하였으며, 프랑스로부터 인도차이나 북부지역을 기지로 이용하고 통행할 권리를 양도받았다.³³⁾

또한, 일본은 이러한 노력과 함께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했다. 일본은 1940년 8월부터 소련과의 협상을 시작했으며, 소련은 서구 열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불가침 조약 대신 중립협정을 제안했다. 결국, 1941년 4월 13일 소련과 일본 양국은 중립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더욱 손조롭게 남방에 대한 세력팽창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³⁴⁾ 이후 일본은 1941년 7월부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남부지역에 대한 군사력 진출을 본격화한다. 또한, 일본제국 육군은 미국의 보호령 필리핀과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그리고 영국령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버마(현재의 미얀마) 등에 대한 공격 역시 계획하였다.³⁵⁾

이러한 일본제국의 침략적 행태에 대해 미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표 4>를

30) 파일 (2008), pp. 321-329; 가토 요코, 양지연 역, 『왜 전쟁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와 '세계의 길' 사이에서』 (파주: 세계질, 2018), pp. 80-88.

31) 박영준,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국제질서관과 제국 일본의 전쟁원인,” 『일본연구논총』 제48호, 현대일본학회, 2018, pp. 51-55; 가토 (2018a), pp. 338-354; 파일 (2008), pp. 333-337.

32) 가토 (2018b), pp. 172-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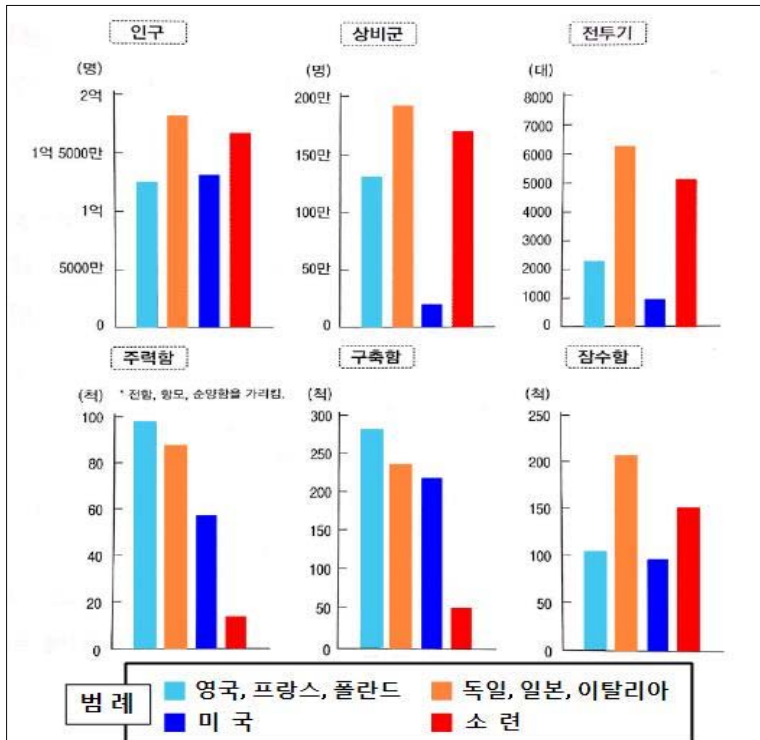
33) 박영준 (2018), p. 57; 존 키건, 류한수 역, 『2차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7), pp. 367-368.

34) 가토 (2018b), pp. 284-287.

35) 박영준 (2018), p. 58.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 개전 초기 미국의 군사력 규모(특히, 육군과 공군)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당시 미국은 19세기 당시의 수준과 유사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미국 육군 사단은 편제의 50% 수준만이 보직된 상태였으며, 4년 주기로 합동 기동훈련을 할 정도로 전투 준비태세 수준도 그리 높지 않았다. 또한, 항공전력 분야에서도 1939년 당시 160대의 전투기와 52대의 폭격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미국은 1942년 1월에 작전 투입 가능한 360만 명의 병력의 1년 내 양성을 계획하였으나, 이마저도 양성된 10개 사단 중 7개 사단은 유럽 전역에 배치하려 했다.³⁶⁾

〈표 4〉 1939년 당시 연합국(英·佛·플), 추축국(獨·日·伊), 미국과 소련의 국력



* 출처: 가토 요코, 윤현명·이승혁 역,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청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파주, 서해문집, 2018), p. 391.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볼 때 미국 역시 일본제국의 세력 확장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기는 했으나, 아시아보다는 유럽의 전역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 제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취할 수 없었다.

36) 기세찬, “태평양전쟁 초기 연합국의 동맹전략과 대일작전,” 『史叢』 제72호,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1, p. 312.

미약한 군사력으로 인해 일본의 팽창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이 어려웠던 미국은 대일 석유 금수 조치와 미국 내 일본인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미국은 1941년 4월 헐(Cordell Hull) 국무장관이 마련한 대일 국제 행동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일본의 공세적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미일 간 협상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안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A안은 중국에서의 일본군 철수를 향후 25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일본의 제안이었으며,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두 번째, B안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항공유 100만 톤을 판매한다면 1941년 7월 일본이 진주(進駐)한 인도차이나 남부지역에서 군대를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11월 26일 '헐 노트(Hull note)'를 통해 일본이 즉각적인 인도차이나, 중국에서의 군대 철수와 함께 사실상 독일·일본·이탈리아 간 삼국동맹에서 이탈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27일 도쿄에 당도한 헐 노트를 받아들인 일본 지도부는 미국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전역에 대한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계획 수립에 몰두하기 시작했으며, 1942년 5월까지 <그림 1>과 같이 세력권 팽창했다.³⁷⁾

<그림 1> 태평양전쟁 초기 일본제국의 세력 팽창(1941년 12월 ~ 1942년 5월)



* 출처: Mark E. Stille, *The Imperial Japanese Navy In the Pacific War*(Oxford: Osprey Publishing, 2013), p. 30.

37) 키건 (2007), pp. 368-376.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과거 일본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강화회의, 워싱턴 해군조약, 런던 해군조약 등을 통해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열강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아왔다. 이러한 견제로 인해 당시 일본제국 국내에는 군국주의적 군부세력이 성장했고, 이들은 런던 해군조약 이후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제국을 장악했다. 그렇지만 그들도 아시아 내 식민지를 보유한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구 열강들의 견제라는 국제체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지나친 세력팽창을 자체적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39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일본제국 내 군국주의자들은 아시아 내 식민지를 보유한 서구 열강들이 모두 유럽 전역으로 관심을 돌린 틈, 즉 아시아지역의 ‘패권 공백(hegemony vacuum)’을 놓치지 않고, 자신들이 계획한 구상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제국의 군국주의자들은 독일·일본·이탈리아 삼국동맹이나 소련과 일본 간 중립조약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역량이 유럽에 집중되어있고, 아직 미국이 완전히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한 시기에 기선(機先)을 제압(制壓)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전격적인 ‘진주만 기습’을 감행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제국 내 군국주의자들의 행태는 아시아지역 내 ‘패권 공백’의 기간을 연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본제국의 지역 패권국 등극을 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IV.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 아베 2기 내각

1.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 ‘보통국가화’의 본격적 추진

제2장 개념적 검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보통국가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반부터 등장했다. 하지만 보통국가가 일본의 국가전략 기조로 등장한 건 2012년 출범한 아베 2기 내각 이후부터이다. 동북아시아의 지역 질서가 변환하고 있는 시점에 등장한 아베 2기 내각의 대외전략 기조는 기존의 일본의 노선과 일부 연속성을 보이면서도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대외전략에 대해서 커티스(Gerald Curtis)는 ‘적응적 대응 전략(coping strategy)’이라고 평가했다.³⁸⁾ 이는 기존 일본의 대외전략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상황에 부합하도록 추구하기보다는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시류에 역행하는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적응해 나

38) Gerald Curtis, *Japan'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oping with Change* (New York: M.E. Sharpe, 1993), Introduction; 박철희, “동아시아 세력전위와 아베 내각의 대외전략 기조,” 박철희 편, 『동아시아 세력전위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서울: 동아시아재단, 2014), p. 20.에서 인용한 것을 재 인용

가는 모습을 보여준 데에 기인한 설명이다. 하지만 아베 2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대외전략 기조는 기존의 대응적이고 수동적인 전략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³⁹⁾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외전략 기조는 1976년 이후 발간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국방전략서라고 할 수 있는 '방위계획의 대강(防衛計画の大綱, 이하 방위대강)' 내 핵심개념의 변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1976년 최초로 발표된 방위대강에서 일본 방위의 핵심개념으로 '기본적 방위력'을 언급한다. 기본적 방위력이란 일본의 방위력에 공백이 생겨 주변 지역에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자주 국가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개념이다. 1976년 최초로 등장한 이 개념은 이후 1995년, 2004년 방위대강 개정에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민주당 내각 하에서 이루어진 2010년 방위대강 개정에서는 '동적 방위력'이란 개념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동적 방위력이란 개념 역시 기존의 기본적 방위력 개념에 평시의 전쟁 억제, 회색지대 사태 시 대응, 유사시 대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추가한 개념으로써 전수방위 원칙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76년 최초 발간 이후 방위대강은 세 차례(1995, 2004, 2010년)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모두 1957년에 책정된 '국방의 기본 방침'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⁰⁾

하지만 2012년 아베 2기 내각 등장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한다.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듬해인 2013년 12월에 전후(戰後) 일본 최초의 국가안보전략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戰略)'을 발표하면서 방위대강의 상위문서가 변경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은 2013년 개정된 방위대강을 통해 기존의 핵심개념인 기본적 방위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통합기동 방위력'을 제시했다. 통합기동 방위력이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지역 및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비하여 견고한 미일동맹 유지를 바탕으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적극적 평화주의(積極的平和主義)'의 명분 아래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기존의 대응적이고 수동적인 작전개념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여 평화헌법의 제약에 묶인 일본이 아닌 보통국가로서의 일본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9) 박철희,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아베 내각의 대외전략 기조," 박철희 편,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서울: 동아시아재단, 2014), pp. 19-23.

40) 조은일, "일본 방위계획 대강의 2018년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 『KIDA 국방논단』 제1742호 (2019. 1.14.), pp. 4-5.

〈표 5〉 일본의 역대 방위계획대강의 변화(1976~2013년)

구분	1976년	1995년	2004년	2010년	2013년
상위 문서	국방의 기본방침(1957년 공표)				국가안전보장전략 (2013년 발표)
안보 환경	美-蘇 간 대탕트	냉전종결, 분쟁증식	테러, 탄도탄 등 新 위협	세력 균형 변화, 북핵 위협	北 핵·미사일 위협, 중국 군사력 증강, 미국 아-태 재균형
핵심 개념	기반적 방위력			동적 방위력	통합기동 방위력

* 출처: 조은일, "일본 방위계획 대강의 2018년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 『KIDA 국방논단』 제1742호(19. 1.14), p. 5.

또한, 2010년 이후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며 동북아 지역의 기존 질서를 교란(攪亂)할 것으로 우려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동조하여 미일동맹을 통한 강력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은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시 부속 도서와 본토에 대한 공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륙작전 전담 기능의 '수륙기동단(水陸機動團)'을 창설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아베 2기 내각 등장 이후의 일본이 보통국가를 목표로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을 점진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⁴¹⁾

이처럼 아베 2기 내각은 출범 이후부터 보통국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2013년 8월에는 의회에서 '국가안전보장 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 7월 1일에는 '새로운 세 가지 요건(新三要件)' 하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석 개헌을 단행했다. '새로운 세 가지 요건'의 첫째는 일본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인해 국가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및 행복권이 전복될 위험이 있을 때, 둘째는 일본의 국가 존립을 완수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셋째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의 실행행사가 필요한 경우이다.⁴²⁾ 아베 2기 내각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5년 9월의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의 의회 통과로 이어졌으며, 이 법안은 이듬해인 2016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평화안전법제의 주요 내용은 재외 일본인 등의 보호조치를 명시한 자위대법 개정,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영향사태

41) 조은일 (2019), p. 6.

42) 한의석, "헌법 개정 시도를 통한 보통국가화 추구," 박철희 외, 『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pp. 86-92.

안전확보법, 존립 위기사태 및 무력공격사태에 대비한 사태대처법,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서의 임무 확대 관련 국제평화협력법 등이 있다.⁴³⁾

2. 아베 2기 내각의 '보통국가화' 추진에 대한 다각적 평가

아베 2기 내각의 '보통국가화' 추진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는 아베 2기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평화안전법제와 평화헌법 개헌 추진, 자위대 해외 파견 활성화 등 일련의 조치는 군사대국화(軍事大國化)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⁴⁴⁾ 특히, 경제학자인 이시카와 야스히로(石川康宏)는 아베 2기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개헌과 무기 수출 3원칙을 수정하며 군사대국을 추진하는 건 일본의 방위산업체들이 소속된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정경(政經) 간의 유착을 지적하고 있다.⁴⁵⁾ 또한, 일본 언론계의 국방 전문가인 한다 시게루(半田滋)는 2012년 아베 총리가 재등장한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와 평화안전법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역 문민통제(逆 文民統制)'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⁴⁶⁾ 이와 같은 일본 내부의 비판적 연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본 내부에서조차 현 아베 2기 내각의 보통국가화 추진이 과거 전범(戰犯)국가, 군국주의 국가로의 회귀로 연계될 가능성을 매우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대한 반감(反感)이 지배적인 한국에서 역시 아베 2기 내각의 보통국가화 추진의 목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인호는 아베 2기 내각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 아베 총리의 우경화 정책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논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헌법 해석 변경은 '군사대국'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아베 2기 내각의 보통국가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⁴⁷⁾ 또한, 김재엽은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과 적 기지 공격론을 중심의 군사적 함의를 도출한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의 보통국가 노선은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세력 확장에 맞서 전략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면

43) 황세희, "전쟁 가능한 일본을 향한 안보정책 전환," 박철휘 외 (2018), pp. 196-202.

44) 고모리 요이치, "군사대국을 노리는 아베의 개헌 전략," 고모리 외 (2018), pp. 19-63.

45) 이시카와 야스히로, "군사대국을 향한 재계의 염원과 딜레마," 고모리 외 (2018), pp. 179-235.

46) 한다 시게루 (2015), pp. 233-274.

47) 이인호,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동아연구』 제34권 2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5, pp. 85-87.

서도, 아베 총리와 2기 내각 주요 인사들의 사고 기저에 내포된 역사 수정주의적 관점으로 인해 일본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지역 군비경쟁 촉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오히려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역내 안보 질서의 불안정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⁴⁸⁾

〈표 6〉 일본의 주요 국가전략론 특성

구 분	평화국가론	미들파워(중견국) 국제주의	보통국가론	수정주의적 국가주의
평화헌법	호 헌	호 헌	호 헌(개헌 가능성)	개 헌
방위력강화	비무장, 전수방위, 애초 미일동맹 폐기, (90년대 이후 미일동맹 인정)	방위력 강화 미일동맹 강화	경제력·기술력 강화 미일동맹 강화	방위력 강화 핵무장 추구 공극적 자력국방
역사문제	과거사 반성	과거사 반성	과거사 반성	과거사 긍정
아시아정책	아시아·대중 협력	아시아·대중 협력	아시아·대중 협력	대중 위협 인식

* 출처: 박영준,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80호 (2013), p. 97.

하지만 한국 내의 많은 학자가 아베 2기 내각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영준은 2012년 아베 2기 내각 출범 직후 아베 2기 내각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가 전략 범주를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영준은 논문에서 일본 국가 전략론의 범주와 특성을 〈표 6〉과 같이 구분하고 있는데, 2013년 당시 갓 출범한 아베 2기 내각의 국가전략을 ‘보통국가’와 ‘수정주의적 국가주의’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라고 규정했다. 이는 아베 2기 내각이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극단적 성향의 수정주의적 국가주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저자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대응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인상적인 부분은 아베 2기 내각이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국방군화(國防軍化) 노력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지나친 과민 반응 자제를 촉구한 점이다.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국방군화로 인해 일본의 군사력 사용범위가 다소 넓어진다고 해서 미일동맹 체제 아래에 놓인 현대의 일본이 과거 제

48) 김재엽, “보통국가’ 일본의 군사적 함의: 집단적 자위권, 적 기지 공격론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2권 제2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pp. 126-129.

49) 박영준,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80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pp. 94-106.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과 같이 침략적인 성향을 드러낼 것처럼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飛躍)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⁵⁰⁾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미일동맹과 서태평양 전반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 경쟁을 연계한 연구 역시 매우 흥미롭다. 남창희는 이 논문을 통해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 해석 개헌, 2015년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과 같은 조치의 원인을 구조적 현실주의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아베 2기 내각의 보통국가화 행보가 정치적 우경화와 국가주의와 같은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주로 추동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서태평양의 세력분포 변화라는 국제체제적 요인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⁵¹⁾

3. 일본 정부 공식문서에 나타난 보통국가화의 원인: '지역 패권경쟁'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보통국가 추진 배경과 기존연구,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틀을 기반으로 2018년 재개정된 방위대강의 내용을 검토해보겠다. 2018년 12월 18일 국가안보회의와 각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2018 방위대강은 제1장 '방위대강 책정의 취지', 제2장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제3장 '일본의 방위 기본방침', 제4장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선 사항', 제5장 '자위대의 체제', 제6장 '방위력 지원 요소' 등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방위대강의 핵심개념은 '다영역 통합 방위력'이다. 다영역 통합 방위력이란 기존 2013년 방위대강의 통합 기동 방위력보다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지상, 해양, 공중이라는 물리적 영역과 함께 우주, 사이버, 전자기파와 같은 신 영역에서의 위협을 모두 대처하기 위한 '다영역 횡단(cross domain)' 작전 수행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⁵²⁾ 이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파 공간의 비대칭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이러한 핵심개념보다는 일본이 도입 예정인 항공모함 탑재형 차세대 전투기(F-35B), 고속활공탄이라 명명된 신형 미사일 등 공세적 무기체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⁵³⁾ 2018 방위대강과 '19-'23 중기방위력

50) 박영준 (2013), pp. 114-118.

51) 남창희, "서태평양에서의 미중 세력 경쟁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 『국방연구』 제58권 제4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5, pp. 33-61.

52)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for FY 2019 and beyond* (Tokyo: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8), p. 9.

53) 서승욱, "극초음속 미사일에 스텔스 전투기, 공격 전력 확대하는 일본," 『중앙일보』 (2018.12. 6.) <https://news.joins.com/article/23183933> (검색일: 2020. 3.12); 김진우, "골격 드러내는 일본 무장 강화 지침 '방위대강'...'개헌 전에 괴헌,'" 『경향신문』 (2018.12. 5.)

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画)에 등장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기(STOVL: Short Take Off and Vertical Landing, 이하 수직 이착륙기)’는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지상군(육군,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잠재적 적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공세적 임무를 수행한다. 일본은 이미 전장 248m, 만재배수량 27,000톤의 제원을 가진 ‘준(准) 항공모함’ 이즈모급 호위함을 보유하고 있어, 이즈모급 호위함 두 척의 비행갑판을 개조하여 미국에서 도입예정인 F-35B 수직 이착륙기를 운용할 예정이다.⁵⁴⁾ 수직 이착륙기뿐만 아니라 2018 방위대강 최초로 등장한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島嶼防衛用 高速滑空彈)’ 역시 사실상 ‘초음속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 방위대강과 ‘19-’23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는 고속활공탄 운용목적을 ‘도서지역 방어용’이라고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미사일’이라는 점은 주변 국가에 큰 위협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⁵⁵⁾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신무기체계 도입만을 놓고 선불리 군사대국, 군국주의로의 회귀라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 논리적 비약일 가능성이 크다. 2018 방위대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3장 ‘일본의 방위 기본방침’이다. 이 부분에 명시된 내용은 일본의 방위정책의 큰 틀을 구성하며, 세부적인 정책 및 계획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018 방위대강에 명시된 일본의 방위 기본방침은 ‘일본 스스로의 방위체제 강화’, ‘미일동맹의 강화’, ‘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가장 우선 등장하는 ‘일본 스스로의 방위체제 강화’는 한국적인 표현으로 ‘자주국방(自主國防)’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부분에서는 일본 스스로 민·관·방(防) 간 종합적인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방위력 개념(다영역 통합 방위력)과 방위력이 완수해야 할 임무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주국방’의 요소가 강한 ‘일본 스스로의 방위체제 강화’ 부분에서 ‘일본 방위력의 필요성’을 “미일동맹 체제 아래 일본 스스로의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으로써, 이를 통해 미일동맹의 결속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⁵⁶⁾ 일본의 방위 기본방침 세 가지 중 ‘미일동맹 강화’라는 부분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주국방을 말하는 부분에서마저 일본 방위력의 필요성을 미일동맹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방위대강의 내용과 구성을 통해 일본 아베 2기 내각이 추진해왔던 보통국가화의 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051700001(검색일: 2020. 3.10).

54)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8a), pp. 18-19;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Medium Term Defense Program(FY 2019-FY 2023)*(Tokyo: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8), pp. 8-9.

55)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8a), p. 29;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8b), p. 9.

56)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8a), pp. 6-13.

적이 앞서 살펴본 '수정주의적 국가주의'나 과거 일본제국의 '군국주의'로의 회귀가 아닌 궁극적으로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일본의 국익과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함⁵⁷⁾이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결국,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과거 2차대전 당시 미국과 태평양에서 맞서 싸웠던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침략주의적인 일본으로 돌아가자는 '군국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2차대전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 세력 균형자가 된 미국과 더 긴밀한 밀착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여 일본의 국가안보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왜 이토록 보통국가화를 통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동북아시아 지역 내 국제체제적 특성이 '패권안정(hegemony stability)'에서 '패권경쟁(hegemony competition)'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역내 안보 상황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했던 미국 중심의 지역 질서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2010년 이후부터 센카쿠 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다오위다오: 钓鱼岛及其附属岛屿)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2012년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회색지대(gray zone) 사태' 유발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했다.⁵⁸⁾ 이처럼 중일(中日) 간 대립 구도가 격화되면서, 중국의 경제력 성장과 군사력 현대화는 일본 아베 내각에 매우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중국이 제1도련선 내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활동 무력화 목적으로 해군력과 미사일 전력 증강을 통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면서,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 강화를 선택해야만 했다.⁵⁹⁾

또한, 일본이 최근 들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다. 북한은 2016년부터 3차례의 핵실험과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일본의 가장 시급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운반능력은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운반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점차 향상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자국의 안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인 동시에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⁶⁰⁾

57) 김두승,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3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7, pp. 6-17.

58) 이기태,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과 '일본회의': 강한 일본의 지향과 미일동맹의 구조 사이에서," 『일본연구논총』 제48호, 현대일본학회, 2018, pp. 101-104.

59)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9 DEFENSE OF JAPAN* (Tokyo: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9), pp. 57-86; 남창희 (2015), pp. 47-49.

위에서 살펴본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양상의 격화와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더욱 가속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또한, <표 7>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군사력이 동북아 역내 주요국가들의 군사력과 비교할 때 해군력을 제외하고는 양적으로 열세하다는 점도 일본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전수방위'의 원칙을 폐기하고 보통국가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시간이 갈수록 신냉전(新冷戰)의 성격이 짙어지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적 국제체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패권경쟁'적인 국제체제적 특성 속에서 일본은 국가안보와 생존을 위해 미일동맹의 상호 일체화와 역할 분담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통국가' 일본의 자구(自救)적 노력을 반일감정에 치우쳐 '군국주의'라는 오래된 색안경으로 바라보고 21세기 현재 일본의 대외정책을 오판(誤判)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7> 2019 일본 방위백서 상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국가 군사력 비교

구분	한국	미국 (駐韓 / 駐日)	일본	중국	러시아 (동부군관구)	북한
지상군	병력 51.9만	1.8만 / 2.3만	병력 14만	병력 100.5만	병력 8만	병력 110만
해군	함정 240척, 21.7만 톤	함정 30척, 40만 톤 함재기 50기 *7함대(駐日)	함정 135척, 48.8만 톤	함정 760척, 190만 톤	함정 260척, 64만 톤	함정 780척, 11.1만 톤
공군	총 640기	80기 / 150기	총 400기	총 2,890기	총 350기	총 550기

* 출처: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9 DEFENSE OF JAPAN (Tokyo: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9), p. 46.

V. 결 론

아산정책연구원이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조치 이후 2019년 8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2.30점에 머물러 201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 역시 10점 만점에 1.10점에 그쳤다.⁶¹⁾ 또한, 한일갈등에 대한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 등

60)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9), pp. 94-107.

61)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순위는 다음과 같다. 미국(5.45점), 중국(3.63점), 북한(3.44점), 일본(2.30점). 특히, 아베 총리(1.10점)에 대한 호감도는 북한 김정은(2.40점)에 대한 호감도에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제임스 김, 강충구, "위기의 한일관계, 한국인의 인식과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9-24호 (2019. 9.10.), p. 2.

정부의 대응을 평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6.1%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으며, 37.2%만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평가의 이유로 대일 경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외교적 대안을 충분히 찾지 않았다는 점,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⁶²⁾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한일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한 설문 조사 결과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본에 대한 감정 악화가 한일갈등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짐작해볼 수 있다. 우리 한국인들의 심리 내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반일감정은 21세기 한국 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도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과거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 일본제국의 군국주의와 현대의 2012년 아베 2기 내각 등장 이후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분석해보았을 때 이 두 가지 개념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달랐으며, 현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과거 일본제국의 군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의 국제체제적 특성은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아시아지역 내 '패권 공백(hegemony vacuum)'이 발생하여 과거 일본제국이 거리낌 없이 공세적 팽창과 침략을 자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일본제국 입장에서는 태평양과 연한 미국의 존재가 부담이었지만, 당시 미국의 국력수준이나 유럽 전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거 일본제국이 공세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현대의 일본과 비교하여 제약요소가 미미한 편이었다. 하지만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의 현대 일본의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 격화됨은 물론, 이에 따라 역내의 지정학적 질서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변모하면서 일본은 자국 안보의 증추인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통국가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다.

과거 '군국주의'적인 일본제국이 20세기 초반 약 36년 동안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자행했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만행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결코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광기어린 군국주의에 빠져 대다수 아시아 국가의 많은 국민에게 그들이 저지른 '역사적 사실'은 수십, 수백,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진실된 역사로 기억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1세기 현대 일본의 행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언제까지나 과거 일본제국의 '군국주의'라는 낡은 잣대를 계속해서 들이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일 것이다.

62) 제임스 김, 강충구, (2019), pp. 5-6.

대표적인 신현실주의 학자 월트(Stephen M. Walt)는 ‘위협균형 이론(the balance of threat theory)’을 제시하면서, 국가 간 위협의 균형을 구성하는 ‘위협수준 영향요인’을 ‘총체적 국력(aggregate power),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 proximity), 공격적 군사력(offensive power), 공격적 의도(aggressive intentions)’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⁶³⁾ 이 네 가지 요인 중 ‘총체적 국력’과 ‘공격적 군사력’이란 요소는 기존에 월츠가 주장했던 ‘세력균형 이론’에서도 고려했던 요인이었으나, 월트는 ‘위협’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지리적 근접성’과 ‘공격적 의도’라는 새로운 요인을 추가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제체제 내에 존재하는 단위 국가들은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아니라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맞서서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 형성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았다.

현대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보통국가화는 결국 과거와 같이 군국주의적 일본으로의 회귀귀로 귀결될 것이라 믿는 이들은 일본이 과거와 같이 높은 ‘공격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눈에는 현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모든 행태 하나하나가 군국주의적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볼 때 이 ‘공격적 의도’라는 것은 ‘상수(常數)’라기 보다는 ‘변수(變數)’에 가까운 개념이다. 그러므로 공격적 의도라는 변수를 상수로 가정하여 현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바라본다면 정확한 현대 일본의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제국이 남긴 군국주의의 유산으로 점철된 ‘색안경’을 벗고, 현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아야만 그들이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안보정책, 군사전략에 대해서 아베 2기 내각 시기를 중심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 보니 2020년 9월부터 출범한 스가(菅義偉) 내각 이후 변화되고 있는 보통국가화 추진 정책기조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스가 내각에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방위정책 등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문서가 발간되고 법안 등이 제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스가 시대의 보통국가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63)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7), pp. 21-26.

참 고 문 헌

1. 저서

- 가토 요코. 윤현명·이승혁 역.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청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파주: 서해문집. 2018a.
- 가토 요코. 양지연 역. 『왜 전쟁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와 '세계의 길' 사이에서』 파주: 사계절. 2018b.
- 고모리 요이치. 야마다 아키라. 다와라 요시후미. 이시카와 야스히로. 우쓰미 아이코. 김경원 역. 『전쟁 국가의 부활: 아베 저격수 5인의 기록』 서울: 한솔수북. 2016.
- 박영준. 『제3의 일본: 21세기 일본외교·방위정책에 대한 재인식』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 박영준. 『한국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와 과제: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평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7.
- 박철희. 이주경. 한의석. 이정환. 이기태. 황세희. 오승희. 이창민. 윤대엽. 최은미. 임은정. 송지연. 조아라. 『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박철희 편. 『동아시아 세력전야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서울: 동아시아재단. 2014.
- 야마다 아키라. 윤현명 역. 『일본, 군비확장의 역사: 일본군의 팽창과 붕괴』 서울: 어문학사. 2019.
- 이치로, 오자와. 방인철·김인철 역. 『일본개조계획』 서울: 지식산업사. 1994.
- 최석철. 전건욱. 권태욱. 이춘주. 박창희. 권현철. 김준섭. 『안보관계 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2010.
- 키건, 존. 류한수 역. 『2차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7.
- 파일, 케네스 B. 이종삼 역. 『강대국 일본의 부활』 파주: 한울. 2008.
- 한다 시게루. 조홍민 역.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 집단적 자위권과 전쟁 국가의 귀환』 파주: 글항아리. 2015.
- 헌팅턴, 사무엘 P. 허남성·김국현·이춘근 공역. 『군인과 국가: 민군관계의 이론과 정치』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 Stille, Mark E. *The Imperial Japanese Navy In the Pacific War*. Oxford: Osprey Publishing. 2013.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7.

2. 논문

- 기세찬. “태평양전쟁 초기 연합국의 동맹전략과 대일작전.” 『史叢』 제72호.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1.
- 김두승.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3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7.
- 김재엽. “‘보통국가’ 일본의 군사적 함의: 집단적 자위권, 적 기지 공격론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2권 제2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 남창희. “서태평양에서의 미중 세력 경쟁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 『국방연구』 제58권 제4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 박영준. “인간, 국가, 국제체제, 그리고 일본의 전쟁: 근대 일본의 전쟁원인을 통해 본 21세기 일본안보정책 평가.”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 박영준.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80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아세아연구』 제58권 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5.
- 박영준.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국제질서관과 제국 일본의 전쟁원인.” 『일본연구논총』 제48호. 현대일본학회. 2018.
- 손기형.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과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한국의 전략: 지역안보협력과 ‘국가정체성이슈’의 연계(linkage)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1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 오동룡. “일본 자위대의 명칭변경 움직임과 시사점: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의 논문, 『자위대 조직·장비 명칭 변경안』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75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 이기태.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과 ‘일본회의’: 강한 일본의 지향과 미일동맹의 구조 사이에서.” 『일본연구논총』 제48호. 현대일본학회. 2018.
- 이인호.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동아연구』 제34권 2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5.
- 이정용. “런던군축회의와 일본 해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9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0.
- 한의석. “21세기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국제정치논총』 제57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
- Lasswell, Harold D. “The Garrison 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6 No. 4. 1941.

3. 기타 자료

- 김, 제임스. 강충구. “위기의 한일관계, 한국인의 인식과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9-24호, 2019. 9.10.
- 조은일. 2019. “일본 방위계획 대강의 2018년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 『KIDA 국방논단』 제 1742호, 2019. 1.14.
- 김진우. “골격 드러내는 일본 무장강화 지침 ‘방위대강’...“개헌 전에 개헌.” 『경향신문』 2018.12. 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051700001 (검색일: 2020. 3.10).
- 두산백과. “군국주의.” 『두산백과(doopedia)』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7634&cid=40942&categoryId=31645> (검색일: 2020. 3. 8).
- 서승욱. “극초음속 미사일에 스텔스 전투기, 공격 전력 확대하는 일본.” 『중앙일보』 2018.12. 6. <https://news.joins.com/article/23183933> (검색일: 2020. 3.12).
-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for FY 2019 and beyond*. Tokyo: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8a.
-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Medium Term Defense Program(FY 2019 - FY 2023)*. Tokyo: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8b.
-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9 DEFENSE OF JAPAN*. Tokyo: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9.

<Abstract>

Comparison of ‘Militarism’ and ‘Normal state’ through the Concept of Regional Hegemony: Focus on Imperial Japan before and after the Navy Disarmament Treaty and Modern Japan after Abe Shinzo’s 2nd Cabinet

Kim, Dong-eun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e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Is Japan's normalization of nationalization a return to militarism?”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Japanese Empire during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and the Abe’s 2nd Cabinet in contemporary Japan were compared. Through this,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of the two periods, and as a result, it was intended to deriv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xamples.

During the prewar period of World War I, the militaristic Japanese Empire suffered great damage from the national pride of being the only power in Asia through the Paris Enhancement Conference, the Washington Navy Treaty, and the London Navy Treaty. However, the Western powers with colonies in Asia still existed in the region, so it was not possible to turn them into immediate power expansion. Meanwhile, World War II broke out in Europe. As a result, the Western powers had to focus on the whole of Europe, and the militaristic Japanese empire became a regional hegemony without missing the international system characteristic of “the hegemony.”

Unlike in the past militarism, Japan's case of pursuing common nationalization since 2012 has been carried out in the order of Northeast Asia in the composition of the “cold war” new cold war. In particular, Japan is attempting to transform itself into a normal state to strengthen the US-Japan alliance on a self-reliant level due to the lack of quantitative military power compared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Key Words: Regional hegemony, Militarism, Normal state, Naval disarmament treaty, Arms race